

한국 사회와 정부에 대한 태도에서 진보·보수 집단 간 차이*

안 혜 정 이 민 주 정 태 연†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진보와 보수 집단 간 사회 및 정부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특히 진보와 보수를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20-60대의 성인 533명(남성 249명, 여성 2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진보·보수집단 간 연령차와 지역차이는 뚜렷하였으나, 사회와 정부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에서는 집단 간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특정 정치성향을 띠는 개별 정부를 평가할 때에는 진보와 보수 집단 간의 태도 차이가 매우 뚜렷했다. 즉 진보 성향의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는 진보집단이 보수집단에 비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보수적 성향의 실용정부의 평가에서는 그 반대로 나타났다. 이러한 태도의 차이는 정치적 이념 척도를 통한 개념적 측정을 바탕으로 진보와 보수 집단을 나누었을 때보다 자신의 성향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토대로 하거나 선호하는 정당을 토대로 진보와 보수 집단을 나누었을 때 더 뚜렷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가 갖는 사회적, 학문적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주요어 : 진보·보수, 정치성향 측정방법, 한국 사회와 정부, 참여정부, 실용정부

* 이 논문은 2012년도 중앙대학교 연구장학기금 지원에 의한 것임.

† 교신저자 : 정태연,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84, E-mail : tjung@cau.ac.kr

한국 사회에서는 2002년 대선을 전후로 진보와 보수 간의 정치 이념이 사회 갈등의 주요 축으로 자리 잡았다. 그동안 경제·환경·문화·교육·인권·복지 등 분야를 막론하고 국가보안법, FTA, 4대강, 반값등록금, 무상급식과 같은 각 분야의 다양한 논쟁적 이슈들이 진보 대 보수 이념 대결로 재구성되고 단순화되어 왔다(윤성이, 이민규, 2011; 이진안, 최승혁, 허태균, 2012). 이렇게 많은 사회 이슈들이 진보와 보수의 이념 대결로 재구성 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국민들이 체감하는 진보와 보수의 갈등 수준은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사회 갈등요인별 집단 간 거리감을 비교한 동아시아연구원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사람들은 진보와 보수 집단 간, 그리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 거리감을 2005년에 비해 2009년에 더 멀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한울, 정원철, 2009). 이러한 진보·보수의 갈등이 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는 이유는 이것이 세대 및 지역갈등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12월에 치러진 대선은 세대와 지역 갈등이 결합된 진보·보수의 갈등양상이 확연히 드러난 계기였다고 할 수 있다. 유력한 제 3의 후보 없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양자구도가 형성되면서 보수와 진보의 대 결집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복지·외교·안보 등 주요 정책 이슈에서 양 후보가 내세운 정책 공약들 간 본질적 차이를 발견하기 힘들 정도로 유사했지만 그 어느 때 보다도 진보와 보수의 프레임 경쟁이 활발했고 이는 여론 뿐 아니라 투표율 등 선거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국민일보, 2012; 주간한국, 2012; 한국일보, 2012).

이렇게 갈등 양상이 심화됨에 따라 진보와

보수 개념은 국내 많은 여론조사에서 정치적 행동과 사회적 태도의 주요 예측변수로 거론된다. 그러나 진보와 보수를 주요 이슈로 다루는 국내 연구의 대부분은 이념 성향이 투표 행위에 미치는 영향이나 특정 정책이슈에 대한 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를 다루는 학문분야도 사회학, 정치학, 행정학에 국한되어 있는 편이다. 진보·보수의 이념이 다양한 분야에 걸친 갈등 이슈에서 주요 대립 축으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와 정책태도 이외의 영역에서 진보와 보수 이념이 개인의 태도형성과 의사결정에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다루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문 실정으로, 이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뿐만 아니라 진보와 보수집단의 대립적 갈등 문제에 대하여 심리학적 접근이 요구되는데, 각종 사회적 현상은 표면적으로는 가치와 이념을 내세워 합리적인 사회적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리적인 현상인 경우가 많고, 정치사회적 판단과 행동은 합리성 뿐 아니라 감성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Western, 2007: 정은경, 정혜승, 손영우, 2011에서 재인용).

국내에서 진보와 보수 성향은 투표 뿐 아니라 특정 정부가 출범 한 후에 정부에 대한 지지, 정책평가 및 참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영향은 언론매체나 시민단체의 활동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러한 활동이 개인의 태도형성과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등 역동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한국에서 진보와 보수 개념은 서구의 그것과는 다소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념이 현실에서 작동하는 방식도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사람들이 진보와 보수를 어떻게 심리적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실제 그것이 정치 뿐 아

나라 전반적인 사회적 태도에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 정치심리학 분야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연구주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진보·보수 성향이 사회적 태도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태도는 크게 사회에 대한 인식과 정부에 대한 태도의 두 측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태도의 경우, 일반적인 정부일 경우와 현재 집권 중이거나 집권 했던 현실의 구체적 정부일 경우에 진보·보수 성향이 정부에 대한 태도에 어떻게 다르게 기능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진보와 보수의 개념과 측정

진보와 보수는 정치와 언론 뿐 아니라 시민 사회에서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지만, 일반적으로 진보와 보수를 결정짓는 것에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며, 일상적으로 쓰이는 진보·보수의 용어가 고유한 하나의 관점만을 담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 사회가 안고 있는 역사적 경험과 사회적 영역에 따라 매우 다양한 차원의 문제를 포함하기 때문이다(강원택, 2005; 노병만, 2007).

서구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진보와 보수 개념은 개인의 자율성 대 권위의 존중과 체제유지의 차원으로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법은 한국 사회에서는 잘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한국에서 사용하는 진보와 보수의 용어가 다소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정은경, 손영우, 2011). 강원택(2005)은 한국 사회에서 작동하는 진보·보수의 네 가지 차

원을 구분하였는데, 첫째 경제적, 물질적 가치의 배분과 관련하여 평등과 효율, 분배와 성장, 노동과 자본으로 양분하여 설명하는 좌우 개념 차원, 둘째, 권위를 강조하는 보수와 자유주의를 옹호하는 진보의 구분, 세 번째는 근대적 가치와 탈 근대적 가치의 구분으로서의 보수와 가치, 네 번째는 반공이데올로기를 둘러싼 남남갈등이 그것이다. 앞의 세 차원은 나라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적용가능한 차원이지만 네 번째 차원으로 소개된 대북관계는 한국사회에서 진보와 보수의 개념을 결정짓는데 중요하고도 특이한 이슈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요인이 정치권에서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념 성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입장에 따른 정치적 지지의 관계 역시 확인되었다.

한편 서구의 학자들은 진보와 보수의 개념을 일종의 이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념에서 중요한 것은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개인의 사고와 판단에서의 일관성이라고 주장한다. 바꾸어 말하면, 특정한 사안에 대한 판단에 일관성이 없다면 이념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Hinich, & Munger, 1996). 서구를 중심으로 발전되어온 진보·보수의 개념으로 한국사회의 진보·보수의 양상을 살펴본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에는 높은 비율의 이념적 혼재 층이 존재하며(한겨레, 2011) 다양한 차원에서 이념적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강현창, 2004). 이러한 현상이 나오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념균열이 정치적으로 조직화 되는 서구와는 다른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 때문에 진보·보수 이념이 사회문화적으로 수용되고 작동하는 방식이 다를 것이라는 점

이다. 나머지 하나는 이러한 이념이 발전해온 서구에서조차 세계화·정보사회의 도래, 사회운동의 변화 등으로 인해 각 이념이 현실의 변화를 적절히 담지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 수 있겠다(김호기, 2003). 비슷한 맥락에서 이현지(2003)는 개인의 주관적 이념 성향과 정책이슈에 대한 입장 사이에 일관된 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개인 수준의 이념은 형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한편 김주찬과 윤성이(2003)와 이갑윤(2002)은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지지정당을 결정하기 보다는 지지정당의 정치적 입장이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결정하는 측면이 더 크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서구의 진보·보수개념을 기반으로 한 한국사회의 이념 갈등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한편 그간의 많은 연구들은 한국사회의 이념갈등이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것처럼 심각하지 않다는 경험적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진보·보수간 이념갈등은 외교 및 안보이슈에만 주요하게 나타난다고 보는 일련의 경험적 연구결과들이 존재하는 한편, 경제적 이슈를 포함한 다른 이슈에 대해서는 심각한 이념갈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경험적 근거들이 제시되고 있다(강원택, 2005). 그런데 학문적 영역에서 진행된 이러한 연구의 결과들은 일반인이 체감하는 사회의 현실과 다소 불일치를 느끼게 한다. 진보와 보수의 갈등은 분명히 많은 영역에서 만연하고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현상이며 많은 사람들이 체감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일치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이는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진보·보수의 개념화와 이의 학문적인 개념화의 불일치, 그리고

관련 연구에서 진보와 보수 이념을 측정하는 도구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진보·보수를 측정하는 방법과 그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진보·보수 성향을 다루는 연구들에서 이를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개인에게 직접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물어보는 것이다. 이는 최근 인터뷰나 각종 여론조사 뿐 아니라 학술 연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측정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많은 연구들이 진보와 보수를 양극단에 두고 4점 ~ 11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자가 스스로 생각하는 이념적 위치를 선택하게 하는 방식이다(김무경, 이갑윤, 2005; 김병규, 이곤수, 2009; 박경미, 한정택, 이지호, 2012; 이현지, 2003). 이는 가장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는 측정법이지만 개인마다 이념정향의 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점이 약점으로 평가된다(김무경, 이갑윤, 2005). 두 번째는 정치적 이슈에 대한 태도를 바탕으로 응답자의 정치성향을 판단하는 측정 방법인데(강현창, 2004; 김주찬, 윤성이, 2003), 이 경우 이념 간 갈등이 구체적이고 현저한 이슈와 정책들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나타내는지 측정하여 이를 종합한 점수를 바탕으로 진보 성향과 보수 성향을 판단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차원에서 이념적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세 번째 방법은 자유주의-보수주의의 추상적 차원에서 이념을 정의하고 측정하는 고전적 측정방식이다(Axelord, 1967; Converse, 1964; Luttbeg, 1969; 박경미, 한정택, 이지호, 2012에서 재인용). 최근 국내 연구에서는 Zakrisson(2005)이 개발한 우익권위주의척도(이진안, 최승혁, 허태균, 2012; 이현우, 2008)

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서구에서 개발된 척도를 기반으로 한 이념 측정방법은 최근에 많이 선호되지 않는 추세이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구의 진보보수 개념이 한국사회에서 쓰이는 의미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실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한계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정당 선호 혹은 정당 일체감을 측정하여 진보와 보수 성향을 구분하는 방법을 몇몇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을 지지하거나, 정당일체감 수준이 높은 경우 보수 성향으로,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거나 정당일체감 수준이 높은 경우를 진보 성향으로 간주하여 이념 성향을 구분하는 방법이다(김장수, 2005; 이현지, 2003). 이는 이념성향이라기 보다 정당 소속감이나 선호도에 가까운 개념이지만 이념성향과 관련성이 높고 투표와 정책 선호에 대한 예측력이 높다는 점에서 진보와 보수 집단을 구분하는 하나의 측정방법으로 쓰이고 있다.

사회와 정부에 대한 태도

앞서 밝혔듯 그동안 진행된 진보·보수 성향의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이념 성향이 투표행위에 미치는 영향이나 특정 정책이슈에 대한 태도와 관련성을 알아보는 연구들이었다. 진보·보수 성향과 투표 행위를 다룬 연구들에서, 자신의 이념성향과 가까운 후보와 정당에 대한 투표는 유권자의 이념 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이는 정당 일체감과 결합하여 투표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경험적 근거들이 제시되었다(김장수, 2005; 이내영, 2009). 한편 진보 성향의 사람과 보수

성향의 사람이 특정 정책 이슈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다수의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강원택, 2004; 김무경, 이갑윤, 2005; 황윤원, 2012). 국내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연구들은 정책이슈에 대한 평가에서 한국 일반 국민들의 이념적 일관성이 낮으며(이현지, 2003), 대북 이슈를 포함한 외교 및 안보 이슈 이외의 다른 이슈들에 대해서는 심각한 이념갈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강원택, 2005).

사람들은 사회에 대한 태도를 기준으로 자신의 행위를 결정하게 되는데, 한 사람이 정부를 신뢰하는 정도가 높고 그 사회의 법의식과 이타성 수준이 높다고 생각한다면 사회 규범을 따르거나 협력적 행위에 보다 적극적일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국가정체성이 높은 사람들은 국가의 체제 유지를 추구하며 국가적 규범을 따르는데 충실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가정에서 사람들이 위와 같은 사회적 태도를 결정하는데 진보와 보수 성향이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사람들의 정치적 행동 뿐 아니라 사회 갈등이나 협력 행위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진보와 보수 성향에 따른 사회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알아볼 것인데, 구체적으로 개인이 지각한 사회의 이타성과 개인의 국가정체성을 중심으로 이를 알아볼 것이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이타성이다. 이타성은 도움, 공유, 위로, 협동과 같은 친사회적 행동을 통해 설명되며 이는 시민 민주주의와 좋은 사회(good society)를 만들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조학래, 1995). 이타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궁극적으로 이기적 이득을 취하게 하는 이타성과 사심 없는 이타성을 구분하는데, 대체로 공감에 기반하

는 이타주의를 순수하게 사심이 없는 이타성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감-이타주의 가정에서는 심리학적 이타성을 고통 받는 누군가에 대한 공감적 욕구가 발생하거나 존재하는 것으로 정의한다(Batson, Klein, Highberger & Shaw, 1995). 이러한 공감-이타주의 가정에서 정치적 성향과의 관련성을 연구한 학자들은 보수주의가 불안이나 공격성에 더 동기화되어 있으며(Crouse, & Stalker 2007; Jost, Glaser, & Sulloway 2003), 이는 타인에 대한 낮은 공감과 관련되고 궁극적으로 낮은 이타주의를 예측한다고 본다(Martino & Cocoran, 2008). 따라서 개인의 자율성과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규범과 권위를 중시하는 보수 성향의 사람들에 비해 이타주의 성향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사회적 태도의 두 번째 요인으로 살펴볼 것은 국가정체성이다. 국가정체성이란 한 개인이 국가라는 집단에 속하여 있다는 소속감과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신념의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정세구, 1983). 국가정체성은 심리적 요소로서 국가체제에 관계없이 개인이 심리적 자각을 가질 때 형성되는데(김용현, 박영주, 2011), 이는 국가 속의 개개인에게 보편적 이념으로 작용함으로써 국가 집단이라는 존재의 동일성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구성원 간 사회유대감의 기초가 된다(양승태, 2011). 국가에 대한 소속감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때 개인은 국가에 대한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정체성은 한 국가의 모든 국민들을 결속시키는 유대감을 의미하기 때문에 국가 정체성이 강한 사람은 타국인에 대한 배타성이 높고 개인보다 국가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이현송, 2005). 나아가 국가정체성은 대내외 정책 수립

에 있어 합의적 기반을 제공하는데, 국가정체성이 높은 사회에서는 정책의 성공가능성과 정치의 안정화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김용현, 박영주, 2011). 이를 진보와 보수 성향과 관련해 생각해 본다면, 권위나 체제유지를 중요시하며 안정을 추구하는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국가정체성이 높은 경향을 보일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진보·보수 성향에 따른 일반 사회에 대한 태도 뿐 아니라 정부에 대한 태도를 알아볼 것인데, 구체적으로 정부 신뢰도와 정부법의식을 알아볼 것이다. 먼저 정부신뢰도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정치과정 속에서 정부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한 불가결의 조건이다. 정부신뢰는 정부가 국민의 뜻에 보다 일치하며 공익에 충실하도록 공공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다는 믿음으로 규정될 수 있다(이숙중, 2006). 현재 한국사회는 정부신뢰의 위기라 일컬어 질 만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락세에 있는데(김병규, 이곤수, 2009), 정부신뢰는 정부기관과 시민을 연결하고 협력을 증진시키며 정책수행의 추동력을 확보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정책 추진의 상당한 추가적 비용이 발생하고 정책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박종민, 1991; 조기숙, 남지현, 2007).

진보와 보수의 이념을 정부신뢰도의 예측요인으로 보는 몇몇 선행연구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연구의 결과들은 다소 비일관적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어떤 시점에 조사 하였는가 즉 어떤 대통령이 집권하는 시기에 조사를 진행했는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 이명박 정부 시점에 실시한 연구(김병수, 이곤수, 2009)에서는 진보적일 수록 정부의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2005년 노무현 정부 시기의 자료를 분석한 연구(김상돈, 2009)에서는 보수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국가기관 불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측정 시기에 집권하는 정부가 어떤 정치적 성향을 띠는지에 따라, 자신과 다른 정치적 성향을 띠는 정부 시기에는 정부 신뢰도가 낮은 결과를 보인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김상돈(2009)의 연구에서 같은 노무현 정부 시기이지만 2003년과 2004년에 조사된 자료를 분석했을 때는 이념성향과 국가기관 불신의 차이가 없었던 것을 봤을 때, 꼭 그것이 일관된 패턴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정부에 대한 태도를 평가하는데 있어 정부신뢰도 뿐 아니라 정부의 법의식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함께 알아볼 것이다. 법은 그 사회를 담는 그릇이고 그 그릇을 채우는 것은 사회 일반의 도덕적 양식 내지 가치관이다. 법의식이란 법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나 정신으로(곽한영, 2007),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개인과 사회의 법적 현상에 대한 인지 및 의사결정 능력을 결정하는 법적 행동 성향, 법에 대한 감정 등을 총칭하는 심리적 상태로 볼 수 있다(신정음, 2011). 사람들은 사회규범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기준으로 사회적 행위를 결정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법이라는 사회 규범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형성하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법을 준수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법의식의 개념을 적용하여 일반적 정부일 경우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법의식과 관련한 가치를 얼마나 추구하는지를 평정하게 하고 이를 지각된 정부법의식으로 명명하였다.

연구 과제

앞서 고찰한 여러 개념 및 경험적 고찰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다룰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보·보수 성향에 따라 사회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볼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진보와 보수와 관련한 기존연구들이 주로 다루었던 투표나 정책선호 영역 이외에, 진보·보수 성향이 사회와 정부를 대하는 태도와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개인의 친사회적 행위의 예측요인이 될 수 있는 태도요인을 중심으로, 사회적 태도의 측면에서 이타성과 국가정체성을, 정부에 대한 태도의 차원에서 정부신뢰도와 정부법의식의 네 요인을 기준변인으로 살펴볼 것이다. 문헌 고찰에 근거하여 예측해 보면, 지각된 이타성의 경우 진보 성향의 집단이 보수 성향의 집단에 비해 더 높은 반면 국가정체성의 경우 보수 성향의 집단이 진보 성향의 집단에 비해 더 높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둘째, 진보·보수 성향에 따라 정부에 대한 평가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볼 것이다. 우선적으로 자신이 기대하는 일반적 정부에 대한 태도에서 진보·보수 성향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다음 특정 성향을 띠는 구체적 정부를 평가 할 때 진보·보수 성향에 따른 평가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 참여자에게 자신이 기대하는 일반적 정부와 진보적 성향의 참여정부, 보수적 성향의 실용정부의 세 정부를 각각 평가하도록 하고, 정부에 대한 평가에 있어 정치적 성향에 따른 효과 및 성향과 정부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볼 것이다. 한 참여자에게 세 개의 정부

를 평가하게 하는 접근법을 선택하는 이유는 진보·보수 성향에 따른 정부평가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특정 시점에 집권하는 정부를 대상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해당 시점의 정부의 성향에 따라 진보·보수 성향에 따른 평가 양상이 혼재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 근거하면, 참여자들은 자신의 정치성향과 유사한 성향의 정부를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성향에 따른 사회와 정부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는데 있어, 진보·보수 성향을 세 가지 방법으로 측정할 것이다.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진보·보수 성향은 다양한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측정하는 방법도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진보·보수 성향을 (1) 주관적 성향: 설문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진보·보수 성향, (2) 개념적 성향: 보수주의-자유주의 척도를 바탕으로 한 개념적 측정에 따른 진보·보수 성향, (3) 정당 성향: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에 따라 진보·보수 성향을 구분하여 측정하고, 각 측정 방식에 따라 태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사회 및 정부에 대한 태도 차이가 어떤 성향을 중심으로 나타나며, 한국 사회의 진보·보수의 이념이 갈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주로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한국 사회의 갈등의 중심축으로 작용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바, 향후 학문적 연구에서 이를 어떻게 개념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방 법

연구참가자

본 연구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20-60대까지의 성인 5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20대의 경우 서울 및 경기권에 거주하고 있는 심리학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들에게 설문조사 과제를 통해 40대와 50대 이상 참가자의 자료를 확보하였다. 이 중에서 결측치가 있는 40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533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성별로는 남성이 249명(46.7%), 여성이 284명(53.3%), 세대별로 20대가 111명(20.8%), 30대가 142명(26.6%), 40대가 140명(26.3%), 50대 이상이 140명(26.3%), 출신지역별로는 서울(33%), 경기도(34.5%), 전라도(10.9%), 경상도(9.2%), 충청도(9%), 강원도(2.8%), 제주도(6%)이었다. 자료의 수집기간은 2011년 11월에서 2012년 3월까지로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정부가 집권하던 기간이었다.

측정도구

예측변인

본 연구의 독립변인은 연구 참여자의 진보·보수 성향이다. 연구 목적에 따라 주관적 판단, 개념적 측정, 정당 선호의 세 차원에서 진보·보수집단을 구분하였고, 각각을 따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측정도구 및 집단 구분을 위한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주관적 판단에 따른 진보·보수 성향(혹은 주관적 성향). 주관적 판단에 따른 진보·보수 성향은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는 정치적 성향으로 정의하였다. 우선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정치적 성향을 ‘매우 진보적’에서

‘매우 보수적’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매우 진보적’과 ‘진보적’을 선택한 사람을 주관적 진보 성향으로, ‘보수적’과 ‘매우 보수적’을 선택한 사람을 주관적 보수 성향으로 구분하였고 중도를 선택한 응답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중도를 선택한 응답자를 포함한 274개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259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개념적 측정에 따른 진보·보수 성향(혹은 개념적 성향). 개념적 측정에 따른 진보·보수 성향은 진보, 보수개념을 측정하는 척도 점수를 바탕으로 구분한 정치적 성향으로 정의했다. 척도는 McClosky와 Bann(1979)의 보수-자유주의 척도(Conservatism-Liberalism Scale)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번안은 원문 척도를 심리학 박사가 일차 번역 한 후 박사 및 석사급 연구원 각 1인이 참여하여 문장을 적절하게 다듬었다. 보수주의-진보주의 척도는 총 2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마다 진보·보수 응답이 무작위로 놓여 있고 둘 다 지지하지 않음 응답을 주고 있다. 각 문항은 진보 응답은 -1, 보수 응답은 1, 둘 다 지지하지 않음은 0으로 측정되어 총점이 높을수록 보수주의적인 성향을 나타낸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528$ 이었다. 척도의 총점을 구한 후 점수 빈도별로 1점 이상은 개념적 보수 성향으로, -1점 이하는 개념적 진보 성향으로 구분하고 0점은 결측 값 처리하였다. 결측 값으로 처리된 30개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503명의 자료가 분석 대상에 포함되었다.

정당선호에 따른 진보·보수 성향(혹은 정당 성향). 정당선호에 따른 진보·보수 성향은 개인이 가장 지지하는 정당에 근거한 정

치적 성향으로 정의하였다. 우선 참여자들은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자유선진당 등 총 5개의 정당 중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정당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을 선택한 참여자를 정당선호적 보수 성향집단,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을 선택한 참여자를 정당선호적 진보 성향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63명의 자료를 제외한 총 47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준거변인

진보와 보수집단의 일반사회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타성과 국가정체성을 알아보았다. 설문구성에 사용한 척도는 다음과 같다.

이타성. 이타성은 인간본성의 철학(Philosophies of Humans Nature) (Wrightsmann, 1974)에서 이타성에 해당하는 일부 항목을 발췌,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있으며 7문항은 이타성을 긍정하는 문항(positive), 7문항은 이타성을 부정하는 문항(negative)이다. 이타성을 긍정하는 문항으로는 ‘~는 난처한 사람을 돕기 위해 기꺼이 노력한다.’, ‘~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진정으로 염려한다.’와 같은 문항이, 이타성을 부정하는 문항으로는 ‘속으로는 ~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싫어한다.’, ‘~는 보통 자신의 이익을 얻고자 애쓴다.’와 같은 문항이 있었다. 척도는 -3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에서 3점 ‘매우 동의한다.’인 6점 리커트 척도로,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62$ 이었다.

국가정체성. Lilli와 Diehl(1999)의 국가정체성 척도(national Identity Scale)를 사용하였다. 국가정체성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점 리커트 척도로 '1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에서 8점 '매우 동의한다.'로 측정하였다. 주요 문항으로는 '내가 속한 우리나라는 내가 누구인지를 중요하게 반영한다.', '전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우리나라에 줄 수 있는 것이 내게는 많지 않다.'와 같은 문항이 있었다. 국가정체성 척도는 소속감(membership), 사적 평가(private), 공적 평가(public), 정체성(identity), 비교(comparison)의 다섯 가지 세부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감은 자신이 국가의 훌륭한 구성원이고 유용한 사람임을 측정한다. 사적 평가는 본인이 속한 국가와 국민이라는 자신의 위치에 대한 개인의 감정과 평가를 나타낸다. 공적 평가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국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측정한다. 정체성은 개인의 정체성 평가에 있어 국가가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비교성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자신의 국가를 평가하는 정도이다. 국가 정체성 변인은 척도 항목의 평균을 구하여 사용했으며,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5$ 이었다.

한편 진보와 보수집단이 정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정부 신뢰도와 정부법의식을 알아보았다. 정부 신뢰도와 정부법의식 모두 자신이 기대하는 일반적인 정부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정부의 경우의 세 가지 경우에 대해 각각 평정하도록 하였고, 각각을 평가하는데 동일한 설문 문항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정부신뢰도의 경우 먼저

특정 정당과 상관없는 일반적 정부일 경우에 대한 생각을 물은 후, 노무현 정부(참여정부)일 경우와 이명박 정부(실용정부)일 경우 각각에 대한 생각을 따로 평정하게 하였다. 법의식의 경우 일반적 수준에서 본인 생각을 질문한 후, 참여정부와 실용정부가 법의식을 얼마나 추구하고 있다고(했다고) 생각하는지를 평가하게 하였다. 설문구성에 사용한 척도는 다음과 같다.

정부신뢰도. 정부신뢰도는 Miller(1974)가 개발한 Trust in Government Scale를 사용하였다. Miller의 정부신뢰도 척도는 총 5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마다 정부 신뢰반응은 1점, 비신뢰반응은 0점으로 측정하여 총 0-5점 사이로 정부신뢰도를 측정한다(Robinson, Shaver, & Wrightsman, 1999)에서 재인용). 대표적인 질문항목으로 '당신이 생각하는 ~는?'에 대한 대답으로 '(1) 자신들만 생각하는 소수의 이익을 위해 운영된다.', '(2) 정부는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운영된다.'를 제시하고 (1)번 비신뢰반응을 선택한 경우 0점, (2)번 신뢰반응을 선택한 경우 1점을 부여한다. 이러한 일련의 질문을 일반적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일 경우에 각각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의견의 번호를 기술하게 하였다. 일반적인 정부에 대한 정부신뢰도 Cronbach $\alpha = .66$, 노무현 정부에 대한 정부신뢰도 Cronbach $\alpha = .66$,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정부신뢰도는 Cronbach $\alpha = .72$ 이었다.

정부법의식. 법의식을 측정하기 위해서 곽한영(2007)이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만든 법의식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인지적 영역 중 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7문

항, 정의적 영역에서 법에 대한 신뢰감 15문항, 행동적 영역에서 법 사용의사 6문항 총 28문항을 사용하였다. 대표적 질문항목으로는 ‘법으로 재판을 해도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는 경우가 많다.’, ‘법은 정의를 실현한다.’, ‘우리나라의 법은 합리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다.’ 등이 있었고, 각 질문항목에 대해 일반적 정부일 경우 및 참여정부와 실용정부가 다음의 가치들을 얼마나 추구하고 있다고(했다고) 생각하는지를 각각 평가하게 하였다. 척도는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 ‘매우 그렇다’인 4점 리커트 척도로 평균을 계산해 법의식을 구하였다. 신뢰도는 일반적인 정부의 법의식 Cronbach $\alpha = .70$, 노무현 정부의 법의식 Cronbach $\alpha = .73$, 이명박 정부의 법의식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79$ 이었다.

출신지역 및 주관적 경제수준. 인구통계 정보로 출신지역을 측정하기 위해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의 7개 단일 문항을 제시하고 자신의 출신지역 한 개를 택하도록 하였다. 이후 경상도를 영남, 전라도를 호남, 그 외 지역을 기타로 출신지역을 구분했다. 한편 주관적 경제수준의 경우 대상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본인의 경제수준을 측정하는 단일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하에서 상까지 5점 리커트 척도에 기입하게 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하와 중하를 ‘하’, 중을 ‘중’, 중상과 상을 ‘상’으로 주관적 경제수준을 구분하였다.

결 과

주관적/개념적/정당 중심 진보 · 보수집단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판단, 개념적 측정, 정당 선호의 세 차원에서 변인을 조작하여 각각의 변인에 따른 진보 · 보수집단을 구분하였다. 먼저 세 차원의 변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명목변인 간의 상관을 알아보는 Phi상관계수를 도출하여 그 내용을 표 1에 제시하였다. 상관 분석 결과, 세 개의 변인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관적 성향은 정당 성향과 매우 유의미하면서도 높은 정적 상관 $\phi = .54, p < .001$ 을 보였고 개념적 성향과도 정적상관 $\phi = .30, p < .001$ 을 보였다. 한편 정당 성향과 개념적 성향 간에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유의미한 정적 상관 $\phi = .19, p < .01$ 이 나타났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 조작한 세 차원의 진보 · 보수 성향 변인은 서로 유사하긴 하지만 동일한 것을 설명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세 차원의 변인을 구분하여 연구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진보 · 보수집단의 인구학적 특성

세 차원에서 조작한 변인에 따른 인구학적

표 1. 변인간 상관계수(phi)

	주관적 성향	개념적 성향	정당 성향
주관적 성향	1		
개념적 성향	.30**	1	
정당 성향	.54**	.19**	1

** $p < .01$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주관적/개념적/정당 선호적 진보·보수집단 별 성별, 연령, 출신 지역, 주관적 경제수준의 양상을 표 2에 제시하였다. 진보·보수 집단 간 인구 통계적 차이는 부분적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진보·보수집단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달랐다. 먼저 주관적 성향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였을 때, 연령과 지역에 따라 진보·보수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각각 Chi-square = 28.98, $df = 3$, $p < .001$, Chi-square = 7.48, $df = 2$, $p < .05$. 한편 개념적 성향을 중심으로 진보·보수집단을 구분하였을 때에는

집단 간에 성별, 연령, 출신 지역 등 인구 통계적 특성에서 아무런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정당 선호적 진보·보수 집단 간에는 연령 Chi-square= 15.92, $df = 3$, $p < .01$, 출신지역 Chi-square= 28.83, $df = 2$, $p < .001$, 주관적 경제수준 Chi-square = 10.66, $df = 2$, $p < .01$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요약하면, 개념적 성향을 바탕으로 진보·보수 집단을 구분하였을 때는 집단 간 인구통계학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주관적 성향 및 정당선호를 중심으로 집단을 구분하였을 때 진보와 보수집단 간의 인구 통계적 특성의 차

표 2. 진보·보수 성향에 따른 인구 통계적 특성 (괄호 안은 백분율)

		주관적 성향(n=259)		개념적 성향(n=503)		정당 성향(n=470)	
		진보	보수	진보	보수	진보	보수
성별	남	67(44.4)	58(53.7)	151(45.8)	83(48.0)	123(43.8)	92(38.7)
	여	84(55.6)	50(46.3)	179(54.2)	90(52.0)	158(56.2)	97(51.3)
		$\chi^2 = 2.19$		$\chi^2 = 0.23$		$\chi^2 = 1.09$	
연령	20대	36(23.8)	10(9.3)	74(22.4)	29(16.8)	60(21.4)	28(14.8)
	30대	55(36.4)	21(19.4)	89(27.0)	45(26.0)	83(29.5)	41(21.7)
	40대	32(21.2)	29(26.9)	89(27.0)	44(25.4)	79(28.1)	50(26.5)
	50대이상	28(18.5)	48(44.4)	78(23.6)	55(31.8)	59(21.0)	70(37.0)
		$\chi^2 = 28.98^{***}$		$\chi^2 = 1.99$		$\chi^2 = 15.92^{**}$	
출신 지역	영남	13(8.6)	12(11.1)	33(10.0)	15(8.7)	18(6.4)	26(13.8)
	호남	23(15.2)	5(4.6)	39(11.8)	14(8.1)	49(17.4)	5(2.6)
	기타	115(76.2)	91(84.3)	258(78.2)	144(83.2)	214(76.2)	158(83.6)
		$\chi^2 = 7.48^*$		$\chi^2 = 2.07$		$\chi^2 = 28.83^{***}$	
주관적 경제 수준	하	38(25.2)	27(25.0)	85(25.8)	39(22.5)	78(27.8)	41(21.7)
	중	86(57.0)	57(52.8)	200(60.6)	96(55.5)	169(55.0)	104(55.0)
	상	27(17.9)	24(22.2)	45(13.6)	38(22.0)	34(12.1)	44(23.3)
		$\chi^2 = 0.80$		$\chi^2 = 5.75$		$\chi^2 = 10.66^{**}$	
전체		151(100)	108(100)	330(100)	173(100)	281(100)	189(100)

* $p < .05$ ** $p < .01$ *** $p < .001$

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준거변인 간 상관관계

준거 변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했다. 자세한 상관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일반이타성과 실용신뢰도의 상관을 제외한 모든 변인들 간 상관에서 대체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보고되었다($r = .09 \sim .56$). 특히 참여정부의 신뢰도와 법의식 간($r = .38, p < .001$), 실용정부의 신뢰도와 법의식($r = .43, p < .001$) 간에 매우 유의미하면서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일반 정부의 신뢰도와 법의식은 각각 참여정부의 신뢰도($r = .39, p < .001$)와 법의식($r = .56, p < .001$)과의 상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이다. 이를 위하여 이타성과 국가정체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주관적 성향(진보성향, 보수성향), 개념적 성향(진보적 가치지지, 보수적 가치지지), 정당성향(진보정당지지, 보수정당지지)의 각 변인에 대해 두 집단으로 나누고 독립집단 간 t검증을 실시하였다(표 4). 그 결과 주관적 진보 성향과 보수 성향 집단에서 국가정체성의 수준이 유의미한 차이($t_{(1, 257)} = -2.60, p < .05$)를 보이는 것을 제외하면, 다른 모든 조건에서 이타성과 국가정체성에 대한 태도는 진보 집단과 보수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진보·보수 성향에 따라 일반적 사회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은 주관적 판단에 따라 진보·보수집단을 구분하였을 때 국가정체성의 차이에서만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진보·보수 성향에 따른 사회적 태도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먼저 살펴볼 것은 개인의 진보·보수 성향이 일반적인 사회적 태

진보·보수 성향에 따른 정부에 대한 태도

개인의 진보·보수 성향이 정부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우선

표 3. 준거변인 간 상관계수

	이타성	국가 정체성	정부 신뢰도	참여 신뢰도	실용 신뢰도	정부 법의식	참여 법의식	실용 법의식
이타성	1							
국가정체성	.23**	1						
정부신뢰도	.31**	.21**	1					
참여신뢰도	.16**	.11*	.39**	1				
실용신뢰도	.09	.25**	.22**	.19**	1			
정부법의식	.26**	.45**	.25**	.14**	.18**	1		
참여법의식	.26**	.21**	.22**	.38**	.10*	.56**	1	
실용법의식	.16**	.24**	.18**	.09*	.43**	.44**	.45**	1

* $p < .05$ ** $p < .01$

표 4. 진보·보수 성향에 따른 사회에 대한 태도 (t검증)

	이타성			국가정체성		
	진보	보수	t	진보	보수	t
주관적 성향 (n=259)	-1.26(8.69)	0.34(9.36)	-1.419	4.89(.89)	5.19(.95)	-2.596*
개념적 성향 (n=503)	-.69(8.55)	-1.14(8.72)	.546	4.96(.79)	5.11(.93)	-1.863
정당 성향 (n=470)	-.64(8.40)	-.61(8.60)	-.038	4.96(.82)	5.09(.88)	-1.658

* $p < .05$

참가자들을 주관적 판단, 개념적 측정, 정당 선호에 근거한 측정치를 바탕으로 진보와 보수 집단을 구분하였다. 그 다음, 참가자들의 정치적 성향이 정부(일반적 정부, 참여정부, 실용정부)의 신뢰도와 법의식에 대한 평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정부에 대한 태도의 각 측정치에 대해, 2(진보, 보수) x 3(일반적 정부, 참여정부, 실용정부) 혼합설계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진보와 보수 집단을 구분하는 모든 측정치에서 정부신뢰도와 법의식에 대하여 정치적 성향과 정부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였다. 먼저 정부신뢰도에서 주관적 성향과 정부의 상호작용효과 $F_{(2, 256)} = 33.06$, $p < .001$, 개념적 성향과 정부의 상호작용효과 $F_{(2, 500)} = 8.60$, $p < .001$, 정당 성향과 정부의 상호작용 효과 $F_{(2, 467)} = 61.69$, $p < .001$. 가 모두 유의미 하였으나 주관적 성향, 개념적 성향, 정당 성향 각각의 주효과(진보-보수 집단 간 효과)는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편 정부법의식의 경우 주관적 성향과 정부의 상호작용효과 $F_{(2, 256)} = 13.31$, $p < .001$, 개념적 성향과 정부의 상호작용효과 $F_{(2, 500)} = 5.69$, $p < .01$, 정당성향과 정부의 상호작용효과 $F_{(2, 467)} = 25.29$, $p < .001$. 가 모두

유의미 하였고 주관적성향의 주효과 $F_{(1, 258)} = 5.42$, $p < .05$ 와 정당성향 $F_{(1, 468)} = 5.44$, $p < .05$ 의 주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양상을 그래프를 통해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일반적 정부에 대한 정부 신뢰도와 법의식에 대한 평가는 특정 정치성향을 띠는 구체적 정부를 평가한 경우와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높았을 뿐 아니라 진보와 보수 집단 간의 점수 차이를 나타내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완만하였다. 한편 진보성향을 띠는 참여정부와 보수성향을 띠는 실용정부에 대한 진보·보수집단의 평가 점수의 그래프는 서로 반대 방향의 양상을 나타냈다(그림 1 ~ 그림 6 참고). 즉 진보·보수 측정방법과 정부 평가 내용에 상관없이 참여정부는 보수집단에 비해 진보집단이, 실용정부는 진보집단에 비해 보수 집단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일관된 패턴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자세히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 문제에서 제시한 연구자의 관심에 따라 두 가지 방법을 선택했다. 우선, 일반적 정부일 경우 정부 신뢰도와 법의식에 있어 진보 보수 집단 간 차이를 단순 비교 하였다. 두 번째로 진보·보수 성향에 따른 참여정부

와 실용정부 평가의 상호작용 효과와 단순주효과를 살펴봄으로써 특정 정치 성향을 띠는 구체적 정부에 대한 평가에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아래에서 주관적/개념적/정당 성향의 각각의 차원에서 구분한 진보·보수 집단 간 일반 정부에 대한 평가와 구체적 정부 평가의 양상을 자세히 살펴보겠다.

주관적 성향에 따른 정부 평가 (그림 1, 그림 2)

먼저 주관적 진보·보수 성향에 따라 일반적 정부에 대한 평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정부신뢰도와 정부법의식 모두에서 진보와 보수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 하지 않았다.

한편 주관적 성향에 따라 진보집단과 보수집단으로 나누고 정부(참여정부, 실용정부)에 대한 정부신뢰도를 살펴본 결과 주관적 성향과 정부 요인 간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F_{(1, 257)} = 60.81, p < .001$). 상호작용의 속성을 자

세히 분석하기 위해 단순주효과를 살펴본 결과 참여정부의 경우 주관적 진보집단이 보수집단에 비해 정부신뢰도가 높았다, $F_{(1, 257)} = 17.35, p < .001$. 반대로 실용정부의 경우 주관적 보수집단이 진보집단에 비해 정부신뢰도가 높았다, $F_{(1, 257)} = 36.11, p < .001$. 한편 주관적 진보집단에서는 실용정부에 비해 참여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으나([참여-실용] = 4.54, $F_{(1, 258)} = 194.14, p < .001$) 주관적 보수집단의 경우 참여정부와 실용정부에 대한 신뢰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같은 방식으로 주관적 성향에 따라 참여정부와 실용정부에 대한 정부법의식 평가 차이를 살펴본 결과, 마찬가지로 성향과 정부요인 간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F_{(1, 257)} = 26.31, p < .001$). 단순주효과분석 결과, 참여정부의 경우 주관적 진보와 보수집단 간 정부 법의식 평가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실용정부의 경우 주관적 보수집단이 진보집단에 비해 정부법의식을 유의미하게 높게 평가했다, $F_{(1, 257)} = 17.35,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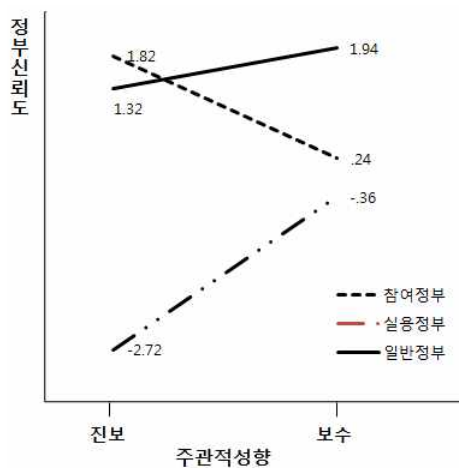


그림 1. 주관적성향(진보, 보수) x 정부(일반, 참여, 실용)에 따른 정부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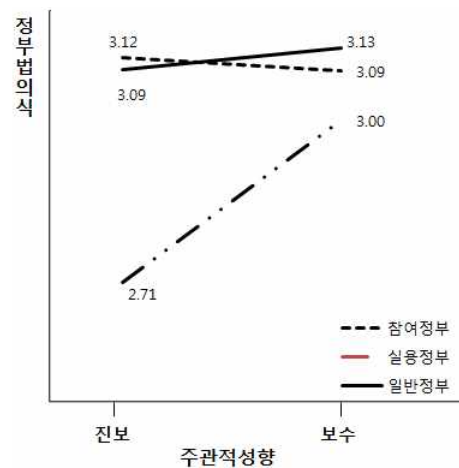


그림 2. 주관적성향(진보, 보수) x 정부(일반, 참여, 실용)에 따른 정부법의식

,₂₅₇) = 22.42 $p < .001$. 진보·보수집단에 따른 각 정부의 법의식 평가는 정부신뢰도에 대한 평가와 유사한 패턴이 나타났는데, 주관적 진보집단에서는 실용정부에 비해 참여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게 평가([참여-실용] = .40, $F_{(1, 258)} = 103.43$, $p < .001$)했으나 주관적 보수집단의 경우 정부 간 법의식 평가에 차이가 없었다.

개념적 성향에 따른 정부 평가 (그림 3, 그림 4)

개념적 성향에 따른 진보·보수 집단 간 일반적 정부에 대한 평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주관적 성향에서와 같이 정부신뢰도와 정부법의식 모두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편 개념적 성향에 따라 진보·보수 집단을 나누고 정부(참여, 실용)에 대한 정부신뢰도를 살펴본 결과 개념적 성향과 정부요인 간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였다($F_{(1, 501)} = 17.13$, $p < .001$). 또한 정부법의식 평가에 있어서도 정

부요인 간 상호작용이 유의미한 것을 확인하였다($F_{(1, 501)} = 8.84$, $p < .01$). 진보·보수집단을 개념적 성향에 따라 구분했을 때 진보와 보수 집단 모두 실용정부에 비해 참여정부의 신뢰도(진보집단 $F_{(1, 501)} = 218.73$, 보수집단 $F_{(1, 501)} = 31.34$, $p < .001$)와 법의식(진보집단 $F_{(1, 501)} = 137.02$, 보수집단 $F_{(1, 501)} = 23.09$, $p < .001$)을 유의미하게 높게 평가했다. 한편 참여정부에 대한 정부 신뢰도([진보-보수] = .28)와 법의식([진보-보수] = .006)의 평가는 진보와 보수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실용정부에 대한 평가는 신뢰도([진보-보수] = -1.260, $F_{(1, 501)} = 18.56$, $p < .001$)와 법의식([진보-보수] = -.12, $F_{(1, 501)} = 7.65$, $p < .05$) 모두에서 보수집단이 진보집단에 비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고 이의 통계적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정당 성향에 따른 정부 평가 (그림 5, 그림 6)

마지막으로 지지정당을 중심으로 진보와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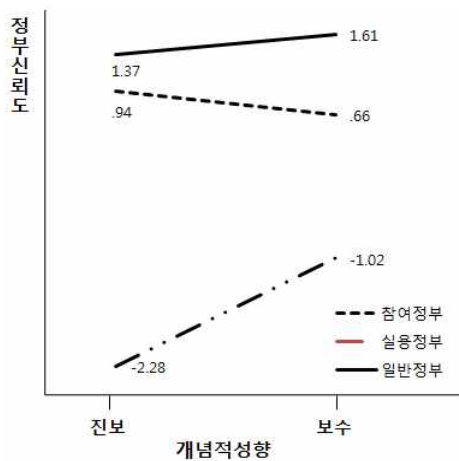


그림 3. 개념적성향(진보, 보수) x 정부(참여, 실용)에 따른 정부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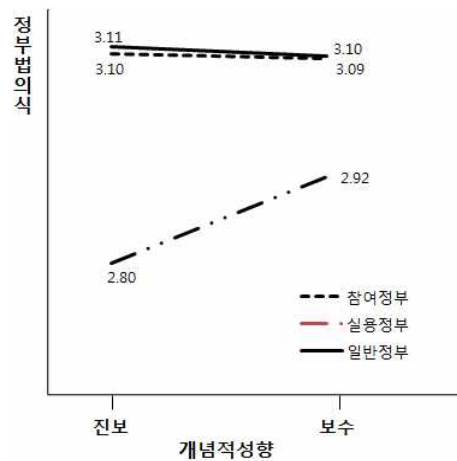


그림 4. 개념적성향(진보, 보수) x 정부(참여, 실용)에 따른 정부법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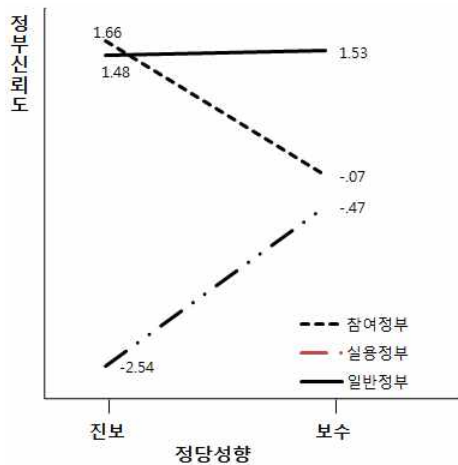


그림 5. 정당성향(진보, 보수) x 정부(참여, 실용)에 따른 정부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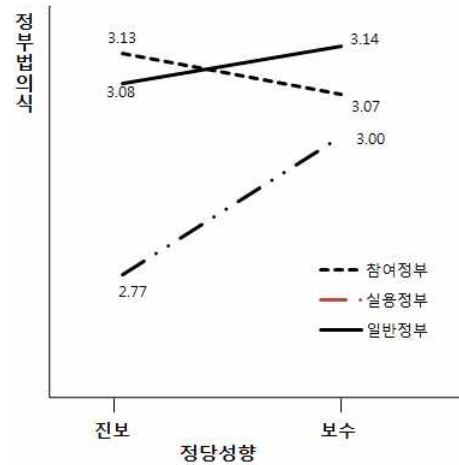


그림 6. 정당성향(진보, 보수) x 정부(참여, 실용)에 따른 정부법의식

수집단을 나누고 일반적 정부에 대한 평가에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앞에서 제시한 주관적·개념적 성향과 마찬가지로 정부신뢰도와 정부법의식 모두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어서 정당성향에 따른 참여정부와 실용정부에 대한 정부 신뢰도 평가의 상호작용을 살펴본 결과 진보·보수성향과 정부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였다($F_{(1, 468)} = 122.32, p < .001$). 상호작용의 양상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주효과를 살펴본 결과, 참여정부와 실용정부에 대한 평가가 진보·보수 집단 간 반대의 양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참여정부 신뢰도는 보수집단에 비해 진보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높은([진보-보수] = 1.77, $F_{(1, 468)} = 37.57, p < .001$) 반면, 실용정부의 신뢰도는 진보집단에 비해 보수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높았다([진보-보수] = -2.07, $F_{(1, 468)} = 52.58, p < .001$). 한편 진보적 정당을 지지하는 집단은 참여정부와 실용정부 간 신뢰도 평

가에 상당히 큰 차이([참여-실용] = 4.20, $F_{(1, 468)} = 373.35, p < .001$)를 보였지만,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집단은 참여정부와 실용정부 간 신뢰도에 차이가 없었다.

한편 법의식의 경우에도 성향과 정부요인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했다($F_{(1, 468)} = 49.43, p < .001$). 실용정부에서는 정부신뢰도와 마찬가지로 보수집단이 진보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법의식을 높게 평가했지만($F_{(1, 468)} = 28.39, p < .001$), 참여정부는 진보·보수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정당 성향에 따라서도 정부신뢰도와 유사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진보적 정당을 지지하는 집단은 참여정부의 법의식을 실용정부에 비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정도가 컸다([참여-실용] = .37, $F_{(1, 468)} = 187.25, p < .001$).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집단 또한 참여정부의 법의식을 실용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했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았다([참여-실용] = .07, $F_{(1, 468)} = 4.54, p < .05$).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진보·보수 성향이 일반 사회에 대한 태도와 정부 평가에 어떻게 관련되는지, 특히 진보와 보수를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수도권에 거주하는 20-60대까지의 성인 5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때 주관적 판단, 개념적 측정, 정당 선호의 세 차원에서 변인을 조작하여 각각의 변인에 따른 진보·보수집단을 구분하고, 자료 분석을 통해 세 차원 중 어떤 진보·보수집단 구분이 가장 사회 및 정부에 대한 태도에서 진보와 보수의 대립 현상을 잘 나타내는지 알아보았다. 그리고 서로 다른 기준에 따른 진보와 보수 성향이 일반 사회 및 정부에 대한 태도에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살펴보고, 정부에 대한 태도의 경우 일반적 정부일 때 뿐 아니라 특정 정치성향을 띠는 구체적 정부일 때를 함께 평가하게 하여 맥락에 따른 태도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았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관적 판단·개념적 측정·정당선호의 세 차원의 변인 간 관계를 살펴본 결과, 세 차원 간 상관의 범위가 .19-.53으로, 각 차원이 유사하긴 하지만 동일한 것을 설명하지는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관적 성향은 서구의 이념을 근거로 한 개념적 성향보다 선호하는 정당 성향과 더 관련성이 높았다. 개념적 성향은 주관적 성향 및 정당 성향과 각각 .30과 .19정도의 상관관계만을 보고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문헌 고찰을 통하여 진보·보수의 정치이념이 서구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세상을 보는 일관적인 틀로 작

용한다면, 진보·보수 집단 간에 일반적 정부 및 사회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러나 연구의 결과 일반 사회 및 정부에 대한 태도는 이타성, 국가정체성, 정부신뢰도 및 법의식 등 대부분의 요인에서 진보·보수 집단 간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 주관적 정치성향에 따른 국가정체성의 차이만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셋째, 일반사회 및 일반적 정부에 대한 태도와는 다르게, 평가의 대상을 특정 정치성향을 띠는 개별 정부로 두었을 때에는 진보·보수 집단 간 태도가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개인의 진보·보수 성향이 일반적인 사회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특정 정부를 평가할 때에는 뚜렷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구체적 정부평가에 있어 개인의 성향과 정부에 따른 2(진보집단과 보수집단) x 2(참여정부와 실용정부 평가)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은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참여정부와 실용정부를 평가하는데 있어 정치적 성향에 따른 주효과는 부분적으로만 나타났지만, 정부와 정치적 성향의 상호작용효과는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참여정부의 신뢰도와 법의식은 진보집단이 보수집단에 비해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실용정부의 신뢰도와 법의식 평가에서는 진보집단과 보수집단의 평가 경향성이 역전되는 일관된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패턴은 주관적 성향과 정당 성향을 중심으로 진보·보수 집단을 구분하였을 때 보다 뚜렷하게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에 비해 실용정부를 평가할 때 진보와 보수 집단 간 더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진

다. 먼저 주관적·개념적·정당선호적 진보·보수 성향 변인의 상관관계는 척도를 기반으로 한 개념적 진보·보수의 측정치가 정치성향에 대한 자기인식 및 정당선호를 예측하는 정도가 높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세 변인에 따른 진보·보수집단의 인구 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주관적 판단 및 정당선호에 근거하여 진보와 보수 집단을 구분하는 경우에 연령 및 출신지역, 경제수준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였으나, 개념적 측정을 바탕으로 진보·보수집단을 구분하는 경우에는 집단 간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다. 유사하게 사회 및 정부에 대한 태도에서도 특정 정치성향을 띠는 구체적 정부를 평가할 때 주관적·정당 선호적 진보·보수 집단 간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개념적 측정에 근거하여 진보·보수 집단을 구분하였을 때는 그 차이가 크지 않았다. 종합하면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 사회의 다양한 사회갈등의 축으로서 진보·보수를 설명할 때 이념에 기반 한 개념적 정치성향보다 선호하는 정당이나 자신의 주관적 평가에 기반 한 정치성향이 한국 사회의 진보·보수 이념에 기초한 갈등적 현실을 설명하는데 보다 현실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본 연구에서 단순히 한 개의 문항을 통해 주관적 자기이념이나 선호하는 정당을 선택하게 한 결과를 바탕으로 구분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한국인이 구성하고 있는 진보·보수의 의미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적어도 서구의 이념에 기반 한 개념과 척도로 한국사회의 현실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기에는 충분하였다. 이러한 한계가 나타나는 데에는 몇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 중 한 가지는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이 진보와

보수의 개념을 서구인들과 다르게 구성하고 있을 가능성이고, 다른 한 가지는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 작동하는 방식이 서구에서처럼 이념적 대립의 양상이 아닌 사회정체성과 관련된 내·외집단 간 대립 양상으로 작동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한국인들이 현실에서 진보와 보수를 어떤 개념으로 구성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한국 사회의 갈등 양상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척도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 일반 사회 및 일반적 정부에 대한 태도에서는 진보·보수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던 반면, 특정 정치성향을 띠는 구체적인 정부를 평가하게 했을 때는 그 차이가 뚜렷했다. 특히 자신의 정치성향과 유사한 정부를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인 것은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유사한데, 이명박 정부에 실시한 연구(김병규, 이곤수, 2009)는 진보적인 사람일수록 정부의 신뢰도가 낮고, 노무현 정부시기의 자료를 분석했을 때(김상돈, 2009) 보수적 성향의 사람들이 정부 신뢰도가 낮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구체적 평가대상을 제시하는 대신에 응답자가 생각하는 일반적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물었을 때에는 진보·보수 집단 간 차이가 나지 않았던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의 결과와 선행 연구의 결과를 연결하여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평소 자신이 살고 있는 시기의 정부에 대해 평가할 때 그 정부가 띠고 있는 정치적 성향을 고려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과 기대는 진보·보수 집단 간 다르지 않음에도, 해당 정부가 특정 정치적 성향을 띠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이를 자신의 정치성

향과 일체감을 고려하여 그 정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참여정부와 실용정부를 평가하는데 있어 진보집단이 보수집단에 비해 평가 점수 차이가 일관되게 더 큰 것을 확인하였다. 참여정부와 실용정부에 대한 평가는 진보집단에서는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평가점수의 차이를 보였지만, 보수집단에서는 부분적으로 평가의 차이를 보였다. 보수에 비해 진보 집단에서 양 정부 간의 평가 차이가 극단적으로 나타난다는 결과는 2009년에 실시된 사회갈등연구(정한울, 정원철, 2009)에서 민주당 지지자들과 진보 성향 응답자들이 사회갈등을 '심각하다고' 체감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던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진보·보수 개념이 일관된 세계관의 틀로써 작동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진보와 보수의 프레임은 사회적 상황의 인식에 있어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당 성향과 주관적 성향의 경우 연령 및 지역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특정 정부에 대한 평가의 차이를 예측하는 요인인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따른 진보·보수 집단으로 구분했을 때 정부에 대한 판단의 차이가 가장 크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유사하게 소득양극화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김동수, 김옥환, 정태연, 최영진(2013)의 연구는 정부의 소득양극화정책을 판단하는데 있어 실제소득이나 정치적 가치, 자본주의 및 평등주의 가치와 같은 사회적 인식 요인은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진보당·보수당 지지 요인만이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한편 안신호(2000)는 연고주의와 관련한 연구에서 사람들의 판단은 욕구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타인들이 보기에는 집단주의로 해석될 수 있는 행동도 행위 당사자로서는 냉철한 판단에 의한 확고한 신념적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미루어 본다면, 진보·보수 양 집단은 각각 자신과 정치적 성향이 유사한 정부를 맹목적으로 옹호하거나,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자신과 성향이 다른 정부에 반대 감정을 가지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가속화된다면 사회갈등을 완화하고 통합을 실현하여 민주주의의 효율적인 작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정한울, 정원철, 2009).

마지막으로 연구의 제한점을 논의하고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기에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결과를 살펴보면 참여정부와 실용정부에 대한 평가에 있어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가 일관되게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이 단순히 정부 간 평가 차이로 볼 수 있을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차이가 발생한 것인지 분명하지가 않고 분석에서도 이 점이 적절하게 통제가 되지 못했다. 만약 박근혜 정부 시기 혹은 그 이후에 같은 방식의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보완적인 해석이 가능해 질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개념적 성향은 자유주의-보수주의 척도를 바탕으로 조작한 것이다. 국내에서도 한국 사회에 작동하는 진보와 보수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를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적절한 척도가 없어 선행 연구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척도를 사용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적 성향이 주관적 성향이나 정당 성향에 비해 현실에 대한 설명력이 높지 않다고 논의

하는 것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에 제한된 결과이지, 넓은 범위로 일반화 할 수 있는 결과는 아니다. 다만, 본 연구에서 주관적 성향과 정당 성향이 구체적 정부를 평가하는데 있어 많은 변량을 설명하는데 반해 그 두 성향이 개념적 성향과 상관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한국 사람들이 진보와 보수의 개념을 다르게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는 결과라 생각된다. 때문에 향후 한국 사람들이 진보와 보수의 가치와 이미지를 다양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경험하고 있고, 그러한 경험들 속에서 어떻게 개념화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한국적 상황에 맞는 척도 개발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한국적 진보 · 보수의 개념화가 개인의 심리적 과정에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후속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

참고문헌

- 강원택 (2005). 한국의 이념 갈등과 진보 · 보수의 경계. 한국정당학회보, 4(2), 193-217.
- 강현창 (2004). 한국의 이념성향과 보혁갈등의 관계 연구: 이념적 일관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곽한영 (2007). 법교육이 청소년의 법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여자 비행청소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국민일보 (2012, 12. 5). 보수 對 진보 총집결로 가는 대선전. 27면 3단.
- 김동수, 김옥환, 정태연, 최영진. (2013). 소득 양극화에 대한 한국인의 입장과 정부정책에 대한 판단.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9(2), 87-108.
- 김무경, 이갑윤 (2005). 한국인의 이념정향과 갈등. 사회과학연구, 13(2), 6-32.
- 김병규, 이곤수 (2009).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본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이명박정부에 대한 국민인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1(3), 893-915.
- 김상돈 (2009). 사회경제적 지위와 정치적 성향이 국가기관 불신에 미치는 영향-정부 정책 불신의 매개효과. 한국사회학, 43(2), 25-54.
- 김용현, 박영주. (2011).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대학생의 안보의식 실태 및 고취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7(1), 187-213.
- 김장수 (2005). 정당일체감에 따른 인식의 양극화-기제와 완충요인을 중심으로. 國際政治論叢, 45(4), 145-168.
- 김주찬, 윤성이 (2003). 2002 년 대통령선거에서 이념성향이 투표에 미친 영향. 22세기 정치학회보, 13(2). 87-103.
- 김호기 (2003). [논단]이념 구도와 이념 논쟁의 사회학. 당대비평 통권, 22,. 103-119.
- 노병만 (2007). 21 세기 초 한국정치의 이념적 지형. 대한정치학회보, 14(3). 143-165.
- 박경미, 한정택, 이지호 (2012). 한국사회 이념 갈등의 구성적 특성. 한국정당학회보, 11(3), 127-154.
- 박종민 (1991). 정책산출이 정부신뢰에 주는 영향. 한국행정학보, 25(1), 291-305.
- 신정음 (2011) 법교육과 법의식 발달의 관계. 교과교육학연구. 15(4). 893-911.
- 안신호 (2000). 투표에서의 연고주의: 집단주의

- 경향성과의 관계 및 기저 동기.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6(1), 145-180.
- 양승태 (2011). 국가정체성 문제와 한국의 정당-거대 담론의 출발을 위한 정치철학적 시론. 한국정치학회보, 45(4), 5-27.
- 윤성이, 이민규 (2011). 한국사회 이념측정의 재구성. 의정연구, 34, 63-82.
- 이갑윤 (2002). 지역주의의 정치적 정향과 태도. 한국과 국제정치 (KWP), 18(2), 155-178.
- 이내영 (2009). 기획논문: 한국 유권자의 이념 성향의 변화와 이념투표. 평화연구, 17(2), 42-73.
- 이숙종 (2006). 정부신뢰와 거버넌스. 국정관리연구, 1(1), 143-172.
- 이진안, 최승혁, 허태균 (2012). 정치적 판단에서 심리적 요인의 역할: 변화가능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6(2), 69-86.
- 이현송 (2005) 미국인의 국가 정체성. 영미연구 13, 165-190.
- 이현우 (2008). 이념투표의 영향력 분석-이념의 구성, 측정 그리고 의미. 현대정치연구, 1(1), 137-166.
- 이현지 (2003). 한국인의 정치의식: 정치적 이념의 형성과 가치변화: 16 대 대선에 나타난 “비동시성의 동시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연구, 7, 125-148.
- 정세구 (1983). 국가정체성의 형성. 한국교육개발원, <https://www.kedi.re.kr/> 에서 1983, 12, 1 인출
- 정은경, 정혜승, 손영우 (2011). 진보와 보수의 도덕적 가치 판단의 차이: 용산재개발사건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4), 93-105.
- 정한울, 정원철 (2009). 여론조사를 통해 본 2009년 안보위기와 국민여론. East Asia Institute 오피니언 리뷰. 1-16.
- 조기숙, 남지현 (2007). 대통령의 리더십과 정부신뢰: 노무현 대통령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KWP), 23(2), 61-92.
- 조학래 (1996). 집단사회복지실천론.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 주간한국 (2012, 9, 17). 진보와 보수 대결... 중도층이 '열쇠'. 008면.
- 한국일보 (2012. 12. 6). 보수-진보 대결집 극한 대결 우려한다 .31면 2단.
- 황윤원, 신중호, 박희봉 (2012). 누가 어떤 정부정책을 선호하는가? 보수와 진보의 이념가치인가?. 한국정책학회보, 21(1), 1-28.
- Batson, C. D., Klein, T. R., Highberger, L., & Shaw, L. L. (1995). Immorality from empathy-induced altruism: When compassion and justice confli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6), 1042.
- Converse, P. E., & Apter, D. E. (1964). *Ideology and discontent*. New York: Free Press.
- Crouse, J., & Stalker, D. (2007). Do right-wing authoritarian beliefs originate from psychological conflict? *Psychoanalytic Psychology*, 24, 25-44.
- Hinich, M. J., & Munger, M. C. (1996). *Ideology and the theory of political choice*. East Lansing, Michigan: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Jost, J., Glaser, J., Kruglanski, A., & Sulloway, F. (2003). Political conservatism as motivated social cognition. *Psychological Bulletin*, 129, 339-375.
- Lilli, W., & Diehl, M. (1999). *Measuring national identity*. Mannheimer Zentrum für Europäische

- Sozialforschung. <http://www.mzes.uni-mannheim.de/publications/wp/wp-10.pdf>
- Martino, E., & Cocoran, D. (2008). *Levels of empathy and altruism in society: An analysis of five distinct age groups*. Doctoral Dissertation. Southampton Solent University, Hampshire. United Kingdom.
- McClosky Jr, H., & Bann, C. A. (1979). On the reappraisal of the classical conservatism scale. *Political Methodology*, 6(2), 149-172.
- Miller, A. H. (1974). Political issues and trust in government: 1964 - 1970.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8(3), 951-972.
- Robinson, J. P., Shaver, P. R., & Wrightsman, L. S. (1999). *Measures of political attitudes*. San Diego, CA, US: Academic Press.
- Wrightsman, L. S., Wuescher, M. L., Stack, L. C., & Young, C. E. (1974). *Assumptions about human nature: A social-psychological approach*. Monterey, CA: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Zakrisson, I. (2005). Construction of a short version of the right-wing authoritarianism (RWA)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9, 863-872.
- 논문 투고일 : 2013. 07. 01
1 차 심사일 : 2013. 07. 12
게재 확정일 : 2013. 11. 21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 Society and Politics Between Liberals and Conservatives

Hyejeong Ahn

Minju Lee

Taeyun Jung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how individual attitudes towards government and society are affected by political conservatism and liberalism. With survey data from 533 adults(M=249, F=284) who live in Seoul and surrounding areas, we examine the general attitudes towards society, expectation on general government and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s the Roh Moo-hyun Gov't and the Lee Myung-bak Gov't between liberals and conservatives. Results show that liberals and conservatives vary by age and residence, whereas attitudes towards the general government and society are not. By contrast, liberals and conservatives are distinctly different evaluating governments with specific political tendency. Liberals are more positive to the Roh Moo-hyun Gov't than conservatives whereas the evaluation appears conversely on the Lee Myung-bak Gov't. These differences of attitudes are more distinctive when dividing liberals and conservatives by subjective judgement and political party preference than conceptual measurement of political ideolog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olitical conservatism and liberalism is the factor that has powerfully affected individual attitudes in the specific political context rather than a consistent ideological framework in Korean society.

Key words : conservatism and liberalism, measurement methods of political orientation, Korean society and government, Participation Government, and Pragmatism Government